

16.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제출자 : 박돈규 의원

○ 회부일자 : 2007년 6월 11일

○ 심 사

·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7. 6. 21)상정, 수정안가결.

2. 주요골자

가. 각종 건축공사현장에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공사책임자 실명 등이 기재된 건축허가표지판의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공사현장 주변 불편민원을 해소코자 함.

3. 근거법령

가. 「건축법」 제19조의2제5항,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4.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도시주택본부장 정명섭)

□ 본 의원이 동료의원 2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 각종 건축공사현장에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소장, 책임감리원 등 공사책임자의 연락처와 같이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각종 건축공사현장의 건축주, 현장소장, 책임감리원, 담당부서 등의 실명 및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건축허가표지판의 양식을 규정함으로써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고 공사현장 민원 발생 시 공사현장 책임자와의 신속한 연락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하여 시공 및 안전관리의 부실방지 및 건축 관계자의 공사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공사현장 주변의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공개행정 구현으로 공사관계자 및 담당공무원간 상호 신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법」 제19조의2제5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표지판의 서식을 제공하여 공사책임자의 실명 및 연락처 등 민원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5. 검토보고 요지(보고 : 전문위원 하재열)

□ 본 조례안은

○ 과거 1972년 12월 30일 「건축법」 개정과 1973년 9월 6일 「건축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운영되어 오던 건축허가 표지에 관한 사항이 19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1999년 5월 11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삭제되었다가 다시 2005년 11월 8일 「건축법」과 2006년 5월 12일 「건축법 시행규칙」에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허가표지판의 통일된 양식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 동 개정조례안은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사현장에서 각종민원 발생시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는 잇점이 있을 수 있다 하겠으며, 특히, 관계자의 E-mail 과 관련부서명, 관련부서 홈페이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의 실현과 아울러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 등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다 하겠으나, 다만 도시미관을 위해 통일된 건축허가표지판의 바탕색이나 글씨색 등을 추가로 규정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건축허가 표지판(제8호서식 관련)의 크기를 공사현장 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 글씨체가 작아 읽기가 쉽지 않게 되므로 적절한 크기로 제작될 필요가 있겠음.	○ 자세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에도 서식이 있는것 아닌가?	○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만 있고 표지판 서식은 현장에 자율성을 주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99에 삭제되었음.
○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표지판의 크기, 색상, 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현재에도 자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그렇게 생각함.
○ 표지판 표시내용 중 e-mail도 포함하여 불필요한 민원, 이해관계자들의 오해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됨.	○ 공사현장을 다니다 보면 건물용도 이용등 필요에 의해 연락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전화가 안될 경우 e-mail을 이용하면 연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e-mail은 아직도 개인적인 성격이 있음. 민원도 음해성 민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의 제공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책임성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됨.

7. 토론요지

-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건축허가 표지판과 관련한 제8호 서식의 내용 중 E-mail과 홈페이지 주소를 삭제하고, 표지판의 규격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